

# Deloitte.



## 2024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 규제 동향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을 중심으로

Simon Brennan(EMEA 지속가능성 규제 허브 리더) 외 4명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June 2024

# 목차

서문	03
지속가능성 규제, 결정적 단계에 들어섰다	04
순환성	08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13
탈탄소화	17
그린워싱	24



# 서문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유럽에서는 탄소배출량 저감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경제가 재편되고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며 비즈니스 비용이 변동하고 있다. 기업들에게는 그 영향이 극명하다.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 못할 경우, 소송과 규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출 손실과 평판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는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주된 원동력이며, 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업 전환을 계획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2024년은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다양한 규제가 발표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몇 가지 주요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최종화될 예정이며, 6월 예정된 유럽연합의회 선거에 따라 다음 단계의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 입법 활동의 방향과 목표가 결정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2024년 동안 전개되는 시급한 사항과 기업의 사업 전략 및 운영 모델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기후 위기에 대한 EU의 대응은 지속가능성 공시 개선과 EU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기업이 새로운 공시 요건을 충족하려면 갈 길이 멀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EU 친환경 전략의 핵심이다. 기업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조직 전반의 활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규제에 기인한 다양한 발전 양상에 CSRD를 활용해 변화를 일으키고 효율성을 불러올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 요건을 넘어, 올해 기업이 초점을 맞춰야 할 네 가지 주제, 즉 순환성, 공급망, 탈탄소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조명한다.



<sup>1</sup> 녹색마크나 녹색문구가 표시된 상품이 시장에서 환경친화적인 상품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부풀려지거나 왜곡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기만한 상황을 총칭함. (출처: 두산백과)

\* 본 보고서는 2024년 2월에 발행된 'Sustainability regulation outlook 2024'의 국문본이며, 해당 시점으로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업데이트된 사항을 반영했다.

순환성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이슈다. EU의 여러 규제 이니셔티브가 제품 디자인,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제품 수리 능력, 수명이 다한 폐기물 처리 지원 등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순환 디자인(Circular design<sup>ii</sup>)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순환 디자인이 부상하면서 기업들에게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 과정에 생겨난 부산물 활용, 타 회사 폐기물을 활용한 제품 설계,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EU는 경제 탈탄소화 전략의 일환으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CSRD는 기업들에게 자체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공급망에 대한 공시까지 의무화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공급업체와의 관계에 투자를 늘리고 구매 결정 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희토류 금속 사용, 삼림 벌채 정도, 인권 침해 국가 내 기업과의 관계 등이 평가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삼림 벌채 배제 규제로 인해, 특정 상품이 생산국의 관련 법률 하에 삼림 벌채 없이 생산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판매와 수입, 수출이 금지된다.

탈탄소화는 많은 EU 이니셔티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CSRD는 대부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업에 배출량 추적, 감축 목표 보고 등을 의무화할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의 여러 규제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데, 이로 인해 기업들은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와 같은 탄소 집약적 수입품에 대한 배출량 데이터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2026년부터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건물과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다. 2024년부터는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에 따라 EU 전역의 건물이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은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 제거, 저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린워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은 자사의 언행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부여 지침(EU Directive for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에 따라 기업 커뮤니케이션은 그린워싱을 배제하도록 변화해야 한다. 2026년부터 '친환경', '탄소중립', '생분해성', '녹색'과 같은 문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업들은 환경 관련 메시지를 알 아듣기 쉽도록 명확하게 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규제와 비즈니스 전략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사항을 서로 연결해야 한다. 또 재무, 내부 리스크 관리, 조달 부서 간의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 하에 기업은 선도적 관행, 변경 사항을 관리하고 일의 차례를 정하는 효과적인 방법, 규제 요건의 추가 변동 사항 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다.



<sup>ii</sup> 순환 디자인은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내구성 있고 재사용이 가능하며 수리 및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순환 경제를 지원하는 관행이다.

# 지속가능성 규제, 결정적 단계에 들어섰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EU 친환경 전략의 핵심이다. 향후 몇 년간 공시를 통해 기업 지속가능성 인증의 투명성 제고로 나아가는 여정이 급물살을 탈 것이다. 2024년 기업의 관심은 지속가능성 공시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다. 이는 상당한 노력과 자원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단순히 규제 준수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사업과 운영 모델에 미치는 규제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야 비로소 지속가능성 공시 요건으로부터 파생되는 기회와 그 접근법의 장기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올바르게 자리를 잡는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전사적으로 이해시키고 도입하는 광범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제는 투명성 제고를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2024년에 CSRD와 공시의 기준이 되는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EU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가 단기적으로는 공시 부담의 범위를 줄였지만, CSRD에 따라 약 5만 개의 기업이 데이터를 공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CSRD의 전신인 비재무공시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이하 NFRD)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했던 기업 수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제한적 인증(Limited assurance)이 요구되는 현 단계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2024 회계연도에 대한 공시 의무가 시작된다. EU 집행위는 늦어도 2028년 10월까지 제한적 인증에서 합리적 인증(Reasonable assurance)으로의 전환을 평가할 계획이다.

CSRD는 EU 역외 지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EU 역외 국가에 본사를 두었으나 EU 규제 영향권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채무증권을 보유한 대기업도 일반적으로 CSRD 공시 규정의 대상이다. 또한 모회사가 EU 역내에 있는 EU 역외 자회사의 경우, 해당 자회사가 설립된 관할권에서 규정하는 공시 요건을 준수하는 동시에 모회사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그림 1.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과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의 공시 일정

규제	제안	입법 동향	발표	발효	적용 시점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 (CSRD)	2021년 2분기	발효	2022년 2분기	2023년 1월 5일	2025년 1분기
		대상: ▶ 비재무보고지침(NFRD)에 따라 이미 공시중인 기업 ▶ 직원 수 500명 이상의 EU 시장 상장사이며 제한적 인증 의무 대상인 비(非)EU 대기업/ 대기업 그룹의 비(非)EU 모기업 최초 공시: 2024년 회계연도 귀속분			2025년 1분기
		대상: ▶ NFRD에 해당하지 않는 EU 대기업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非)EU 대기업이자 EU 시장 상장 최초 공시: 2025년 회계연도 귀속분			2026년 1분기
		대상: ▶ 상장된 중소기업 ▶ 소규모 비복합 신용기관 ▶ 전속보험사 최초 공시: 2026년 회계연도 귀속분			2027년 1분기
		의무적인 제한적 인증에서 합리적 인증으로 전환 가능성 있음			2028년 1분기
		대상: ▶ 대규모 EU 자회사가 있는 경우, 그룹 또는 개별 자회사 차원에서 지난 2년간 EU 내 순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EU 역외 모회사 최초 공시: 2028년 회계연도 귀속분 대상: ▶ 대규모 EU 자회사나 EU 상장된 자회사가 없는 경우, 순매출액이 4천만 유로 이상인 비(非)EU 최종 모회사의 지사 공시: 비(非)EU 최종 모회사의 그룹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 및 공개			2029년 1분기

**강화된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DDDD)은 EU 대기업(전 세계 순매출액 1억 5천만 유로 이상 및 직원 수 500명 이상인 기업)과 비(非)EU 대기업(EU 내 매출액이 3억 유로 이상인 기업)이 사업과 자회사,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2027년부터 환경 및 인권 실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주요 EU 법안이다. CSDDDD의 적용 대상은 향후 몇 년간 더 많은 기업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가치사슬이 국제적인 기업의 경우 CSDDDD로 인한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CSDDDD가 시행되는 2027년까지 이에 대응하는 일은 쉽지 않다. CSDDDD의 요구사항은 CSRD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에게 기후 전환 계획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최초의 EU 법안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총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CSRD와 다른 규제 요건(CSDDDD 등), 또는 EU택소노미(EU Taxonomy) 규정 간의 연관성을 이해해야 한다.

## 정책 입안자들이 주목하는 유럽 및 국제 기준의 상호운용성

국제 기준도 진화하고 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는 2023년에 발표한 두 기준을 기반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물 다양성, 생태계, 생태계 서비스 ▶인적 자본 ▶인권 ▶공시 연결성 등 여러 주제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SSB는 ESRS 작성 기관인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과 긴밀히 협력하여 ISSB 기준과 ESRS가 최대한 일관되도록 하고 두 기준에 대한 공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에 EFRAG와 ISSB는 두 기준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려면 어떤 부분을 점진적으로 공개해야 하는지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ISSB 기준을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

## 떠오르는 이슈에 대한 공시

2024년에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에서 확정되는 프레임워크가 EU 및 국제 공시 프레임워크에 구현될지 여부와 구현 방식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레임워크는 ISSB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기업들은 초기 기후 변화 관련 공시를 넘어 더 광범위한 환경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생물다양성이나 순환성 등 새롭게 떠오르는 주제에 대한 공시 역량을 검토하게 될 수 있다.

## 주목받는 택소노미 공시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제 활동에 대한 공시 메커니즘과 기준을 나타내는 분류 체계이다. EU 택소노미 8조에 따르면 CSRD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은 자본 지출, 운영 비용, 매출액 등의 지표로 고려하여 자사의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과 어떻게,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정보는 CSRD에서 요구하는 독립적인 인증 대상이다.

2024년에 EU 택소노미 공시 규정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 데이터 프레임워크와 데이터 품질이 점점 더 EU 택소노미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전환 계획을 설계할 때 EU 택소노미를 도구로 사용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전환 계획의 질은 대출 기관과 채권 투자자가 전환 계획의 관점에서 기업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4년 이후에는 EU 택소노미의 산업 범위와 지속가능한 활동 목록이 확대되어 더 많은 기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EU 택소노미는 현재 13개 산업을 다룬다. 아직 농업을 비롯해 중요한 산업이 누락되어 있다. 현재 적용되는 산업에는 임업, 환경 보호 및 복원, 제조업, 에너지,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재생, 운송, 건설 및 부동산, 정보통신, 프로페셔널·과학·기술, 금융 및 보험,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등이 있다. 그러나 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의 기업도 택소노미에 포함된 활동에 투자하는 경우 자본 지출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EU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가진 분류체계가 생기고 있다. 그러나 EU 택소노미는 가장 광범위하고 선진적인 프레임워크로, 다른 국가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대부분 EU 택소노미에 맞출 것으로 예상되나 자국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부 수정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국가 차원의 진전 상황과 사업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지속가능 금융 국제 플랫폼'(Internat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은 전 세계 공공 기관으로 구성된 전담 실무 그룹으로, 다양한 택소노미를 비교하고 모범 사례를 장려하여 민간 자본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로 유도할 기회와 장애물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

지속가능성 공시는 단순히 규제 준수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은 CSRD와 ESRS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시 요건의 이행이 어떻게 규제 준수를 넘어 전략과 거버넌스, 운영, 데이터에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올지 고민해야 한다.

### 전략적인 방식을 채택한다.

천편일률적인 방식은 없다. 효과적이면서도 응집력 있는 사업 전략은 비즈니스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지원하는 적절한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기반한다. 또한 전반적인 공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공시 전략은 기업의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재무 부서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나, 회계, 법무, 조달, 컴플라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인사 등 기업의 다른 부서도 참여해야 한다.

### 거버넌스 구조를 평가한다.

기업은 적절한 거버넌스를 마련해 충분한 자원이 지원되는 계획을 운영해야 하고, 다양한 부서와 프로젝트 간의 종속 관계를 다뤄야 한다. 이는 그룹 차원에서 취하는 공시 전략에 따라 연결 지속가능성 공시를 승인해야 할 수도 있는 자회사 이사회와의 관계를 고민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지속가능성 공시 요건이 모든 산업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 인증을 위해 준비하고 공시 오류 리스크를 관리한다.

기업은 공급망과 관련된 공시 리스크를 파악하고 완화하기 위해 실사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공시 목적의 정보 전달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협업하는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내부 역량을 구축하고 인증 모델을 테스트할 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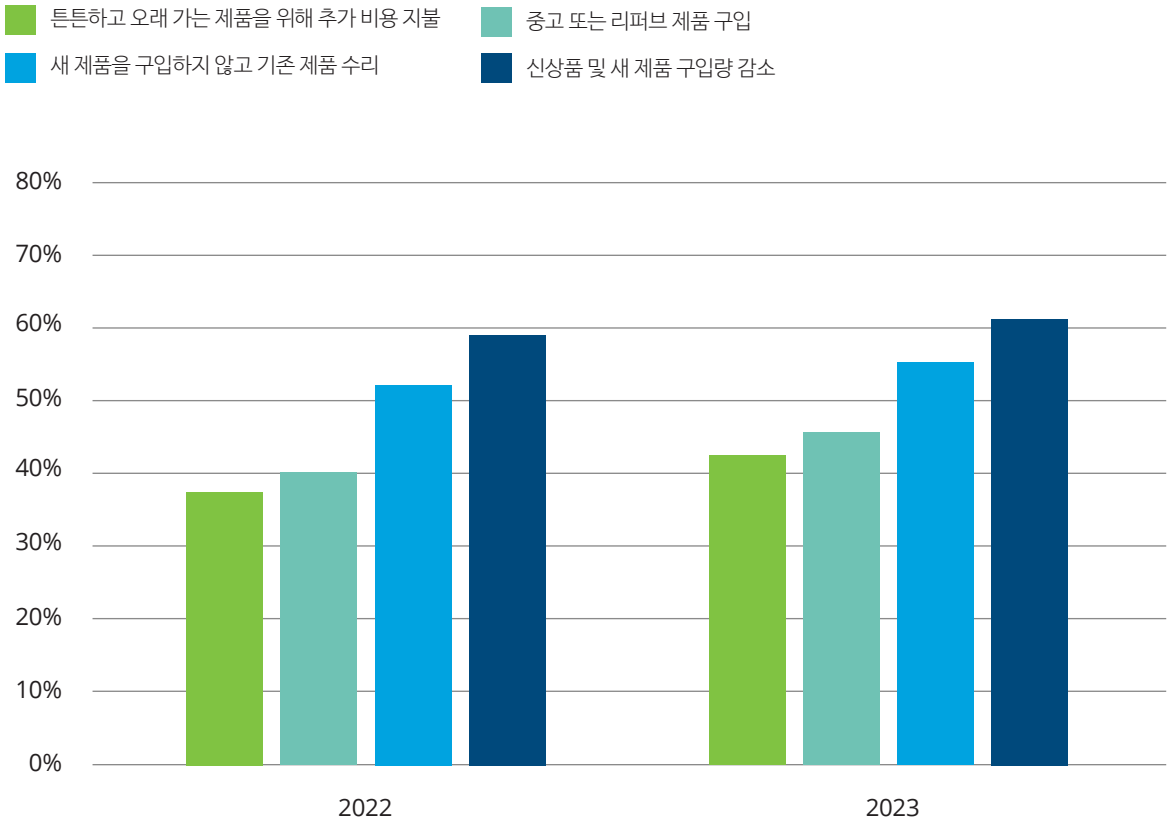




# 순환성

자원순환 분야는 소비자의 요구와 새로운 규제에 힘입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영국 델로이트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점차 제품 및 서비스의 순환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행동을 바꾸고 있다.<sup>1</sup> 이러한 행동 변화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그림3).

그림 2.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소비자 행동



출처: 델로이트 분석, 2023.

EU의 '순환경제 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에 따라 제안된 대부분의 입법 조치는 현재 EU 집행위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제9대 유럽의회가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4월 최종 승인되었으며 이사회 최종 채택을 기다리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가 당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4년 동안 기업들은 '순환 디자인'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데이터 및 거버넌스 시스템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규제상 우선순위와 비즈니스 이슈를 연결하기**

순환경제 실행계획의 주요 규제는 올해 유럽의회가 끝나기 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수리 촉진 공동규칙 지침'(Common Rules Promoting the Repair of Goods),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등이 포함된다. 목표 및 적용 요건 설정에 대한 예상 일정과 CSRD 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순환성 관련 EU 규제 이니셔티브 일정**

규제	제안	입법 동향	발표	적용 시점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2022년 1분기	2024년 4월 23일 유럽의회 최종 승인, 이사회 최종 채택 예정	N/A	2027년 예상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2022년 4분기	2024년 4월 24일 유럽의회 최종 승인, 이사회 최종 채택 예정	N/A	2025년 예상
수리 촉진 공동규칙 지침 (Common Rules Promoting the Repair of Goods)	2023년 1분기	2024년 4월 23일 유럽의회 최종 승인, 이사회 최종 채택 예정	N/A	2026년 예상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 (CSRD)	2021년 2분기	발효	2022년 4분기	2025년 1분기

**순환성과 CSRD의 연관성**

CSRD의 대상인 기업은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에서 개발한 ESRS를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ESRS 5에 따르면 기업은 자원 사용 및 순환 경제 실행 계획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EFRAG는 또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세부적인 순환성 지표를 제공했다. 2026년에 EU는 산업별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은 지금부터 산업별 기준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탄탄한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순환성을 위한 설계**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이하 ESPR)은 섬유, 화장품, 세제 등 12개의 최종 소비재와 철, 철강, 플라스틱 등 7개의 중간재를 포함해 다양한 신규 제품 카테고리를 포함할 예정이다.<sup>2</sup> 따라서 기업의 핵심적인 운영에 ESPR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요건은 추적가능성 외에도 재활용 가능성과 재활용 소재 사용, 내구성 등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제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수리권 법안으로 인해 생산자는 판매 후 소비자에게 비용 효율적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품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생긴다.<sup>3</sup>

이러한 규정들로 인해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 과정에 생겨난 부산물 활용, 타 회사 폐기물을 활용한 제품 설계,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과제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제품의 경우 부산물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특화된 재활용 방식이 부재하거나 동일한 소재 성분에서 소재를 추출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EU 집행위는 ESPR에 따른 제품별 위임법(Delegated Acts)을 위해 우선순위 제품군을 발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제품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에서 제공한 예비 순위를 참고할 것이다. 순위는 다음과 같다.<sup>4</sup> 기업은 이러한 진전 상황을 파악해 자사 운영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 및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4.** 지속가능한 제품 규제 프레임워크를 위한 에코디자인의 우선순위로 고려할 제품군의 예비 순위

환경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영향과 개선 가능성, 경제적 비중, 정책 적용 범위를 기준으로 제품 범주에 부여된 점수



출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신규 제품 우선순위에 대한 예비 연구, 프레젠테이션, 공동연구센터, 2023.03.10

## 산업 간 파트너십

새로운 순환성 요건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소재가 아닌 신뢰할 만한 우수한 품질의 재활용 소재를 제품 및 포장재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전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새로운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이종산업 간 또는 가치사슬 간 파트너십으로 부담 완화가 가능한지 평가해볼 수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에는 다양한 산업의 조직이 고려될 수 있으며, 여러 조직과 산업의 역량을 활용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여러 OEM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리퍼블할 수 있는 공동 허브를 구축하는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다. 가치사슬의 어느 부분이 이러한 파트너십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 브랜딩, 포지셔닝, 마케팅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이하 PPWR) 요건은 다양한 유형의 포장 제품에 대한 재활용 소재 사용 목표치를 제시한다. 이러한 목표치는 점차 높아질 것이다. 기업은 생산을 확대하기 전에 새 포장재의 품질과 내구성, 시장의 반응을 평가하고자 할 것이다. 포장재가 수익을 끌어올리는 차별화 요소인 제품의 경우 이는 특히 더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기업은 신제품에 대한 모든 친환경 표시를 검증하여 마케팅이 ‘친환경 표시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그린워싱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색 전환에 대한 소비자 권한 강화 지침’(Empowering Consumers on the Green Transition Directive)은 포장과 소셜 미디어, 광고에서 ‘친환경’, ‘녹색’ 등의 일반적 표현을 금지한다.

PPWR은 포장재의 양 감소, 재사용과 리필 장려, 포장재 낭비 방지를 목표로 한다. 이 규정은 재사용 목표치를 설정하고, 플라스틱 병과 알루미늄 캔에 보증금 반환 제도를 도입하며, 과대 포장과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제한한다.<sup>5</sup> 기업은 포장재 재사용 요건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 및 운영 모델을 구축할 방안을 강구하고, 이러한 변화에서 잠재적인 비용 제약을 파악해야 한다. 이커머스과 같은 산업의 경우, 기업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을 평가하고 배송용 소형 포장을 설계해야 한다.

## 수명이 다한 폐기물 관리

‘EU 폐기물 운송 규정’(EU Waste Shipments Regulation)과 ‘EU 폐기물 기본지침’(EU Waste Framework Directive)의 개정안을 통해, 모든 EU 회원국이 섬유에 대한 생산자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맞추게 된다. 이 규정은 2024년에 발효되며, 비위험 폐기물의 EU 역외 수출과 역내 섬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된다. 순환 경제 요건에 따라 재활용 소재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폐기물 재활용 시설과 생산 시설을 연결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러한 규제 발전은 EU 역외 국가에 생산 클러스터를 보유한 섬유 기업에 특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 국제 플라스틱 목표 살펴보기

많은 플라스틱 생산업체, 포장재 생산업체, 브랜드, 소매업체는 UN의 ‘신(新) 플라스틱 경제 글로벌 공약’(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을 통해 2025년까지 포장재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설정했다.<sup>6</sup> 목표에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100% 재사용/재활용/퇴비화 가능성 보장, 일정 비율에 따른 포장재의 버진(virgin) 플라스틱 사용 감소,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 비율 증가 등이 포함된다.<sup>7</sup>

기업들은 2025년 글로벌 공약의 세부 목표를 확정 지을 때 EU 폐기물 운송 규정의 진전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 규제안에는 비(非)OECD 국가에 대한 EU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고, 발효 후 4년 이내에 OECD 국가로의 수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 공약 이행 전략을 실행할 때 기업은 운영 전략이 EU 규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

단기간 내에 수많은 지속가능성 규제 요건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기업은 다음 사항에 집중해야 한다.

### 디자인 과제를 파악한다.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과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기업의 핵심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 순환적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 순환적 전환이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포장 규정이 제품 포트폴리오, 물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나, 포장 관련 생산자책임제도와 보증금반환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 데이터 기반과 거버넌스 정책을 검토한다.

데이터 및 데이터 거버넌스 절차를 평가하여 추가 절차를 통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파악한다.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등 추적성 및 투명성 관련 요건을 다루기 위한 기술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 데이터 공백이 확인되면 공시 및 규제 요건에 대응하여 혁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조정 작업을 진행한다.

### 순환성 데이터에 대한 기준치 보고를 개선한다.

비즈니스 및 지속가능성 KPI를 재검토하여 순환성을 포함시킨다. 이는 또한 기업이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자원 사용 및 순환 경제 기준(ESRS E5)에 따라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순환적 전환 전략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한다.

기업은 규제 준수를 넘어 비즈니스 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생산 영역에서의 재활용 소재 활용에 대한 지표를 사용하고, 재활용 소재 소싱의 확대 필요성을 평가하며, 신뢰할 만한 재활용소재 공급업체를 확보할 수 있다.

### 디지털 제품 여권

디지털 제품 여권은 제품 수명 주기 전반적으로 제품 단에서의 데이터(원자재 소싱, 탄소배출량, 공급업체 정보 등)를 소싱하고 공유하기 위해 제안된 도구이다. 컴플라이언스 일정은 제품군에 따라 다르지만, 기업이 EU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유럽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비의류용 소비자 제품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에 디지털 제품 여권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코로나19 팬데믹과 최근 지정학적 격변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성까지 겹쳐, 기업은 공급망에 대한 접근 방식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4년에 기업들은 향후 EU 시장에서 제품 및 서비스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할 여러 EU 지속가능성 정책과 규제 이니셔티브도 고려해야 한다. 관련 규제 동향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면 규정 준수만 염두에 둘 경우 놓칠 수 있는 상업적 기회도 포착할 수 있다.

## 가치사슬과 공급망의 차이

가치사슬은 제품·서비스 구상부터 제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필요한 모든 활동과 자원, 관계를 포괄한다. 가치사슬에는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주체가 포함된다. 다운스트림 주체는 특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유통업체 또는 소비자이다.

공급망은 기업이 자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구성 요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스트림 주체만 포함한다.

이러한 가치사슬의 정의는 ISSB 및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ERS의 정의를 기반으로 한다.

## 공급망과 가치사슬의 미래를 좌우하는 지속가능성 규제

EU는 경제 탈탄소화 전략의 일환으로 공급망 및 가치사슬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데 있어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기업의 공급망 및 가치사슬과 관련된 규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요이다. 기업은 이러한 규제가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한 후 종합적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림 5. 주요 EU 공급망 규제 이니셔티브 일정

규제	제안	입법 동향	발표	발효	적용 시점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DDD)	2022년 1분기	2024년 4월 24일 유럽의회 최종 승인, 이사회 최종 채택 예정	2024년 2분기 예상	2027년 1분기 예상	
EU 배터리 규정 (EU Batteries Regulation)	2020년 4분기	발효	2023년 3분기	2023년 3분기	2023년 3분 기 ~ 2031 년 3분기
핵심원자재법 (Critical Raw Materials Act)	2023년 1분기	2024년 5월 23일 발효	2023년 4분기 예상	2024년 2분기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CSRD)	2021년 2분기	발효 이미 NFRD에 따라 의무적 제한적 인증을 적용해 보고하는 기업의 2024 회계연도 귀속분 첫 공시	2022년 2분기	2023년 1분기	2025년 1분기
삼림 벌채 배제 제 품 규정 (Regulation on Deforestation- free products)	2021년 4분기	발효	2023년 2분기	2023년 2분기	
		중소기업 제외 적용			2025년 1분기
		중소기업 적용			2025년 3분기
		다른 삼림 지역 포함하는 범위 확장 제안 가능성			2024년 3분기
		다른 생태계, 상품, 금융 서비스로 범위 확장 제안 가능성			2025년 3분기

출처: 딜로이트 분석, 2024.



## 기업 공시와 공급망 데이터 간 시너지 효과 실현

2024년 기업은 CSRD에 따른 공시 요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공급망 포함, 사업운영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 CSRD와 공급망

CSRD는 기업이 사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그 일환으로 기업은 공급망을 포함해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사슬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 요건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은 공급망 관리에 대해 현재보다 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특히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구매 결정 시 리스크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2024년에 EFRAG는 가치사슬 공시 방법에 대한 지침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공급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EFRAG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자발적 공시 요건(ESRS)과 상장 중소기업, 소규모 은행, 전속보험사에 대한 의무적 보고 요건(ESRS)에 대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CSRD 공시 요건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상한선을 제시할 것이다.

공급업체의 탄소 및 환경 배출량과 관련된 데이터 포인트는 기업이 EPR 조항과 그 안에 포함된 디지털 제품 여권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에 따라 기업은 원자재 유래, 탄소 및 환경 발자국, 공급업체 정보 등 제품 수기 전반에 걸쳐 제품 단에서의 상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2024년 EU 집행위에서 결정할 특정 우선순위 제품군에 대해 빠르면 2025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미 시행 중인 EU 배터리 규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다. 배터리 또는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는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의 추적성을 개선하고 가치사슬의 주체들이 유관한 에코디자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주요 원자재와 그린 에너지 전환

EU의 그린 에너지 전환은 일부 자재와 부품의 공급 중단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sup>8</sup> 곧 시행될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은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EU 공급망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이러한 원자재의 추출 및 채굴, 가공 및 정제, 재활용 및 수입 의존도를 고려하여 EU 집행위에서 주기적으로 작성하는 리스트를 기반해 전략상 중요한 원자재를 조달하는 기업에 대한 의무 목표가 포함된다. 핵심원자재법은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 집약적 산업, 디지털, 항공우주/방위산업 등 전략상 중요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특히 관련성이 큰데, 이러한 기업들이 허가 절차 단축, 행정 부담 완화, 자금조달 용이성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EU의 공동연구센터는 핵심원자재법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발표해 왔으며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

“EU의 야심 찬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과 2050년까지 자재 수요가 전례 없이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리파워 EU(REPowerEU)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의 희토류 금속 수요가 약 5배 증가할 것이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리튬 수요도 11배 증가할 것이다. 2050년을 내다볼 때 고수요 시나리오에 따르면 네오디뮴, 디스프로슘(두 가지 주요 희토류), 니켈, 리튬, 흑연 등 원자재에 대한 모든 조사 대상 산업의 EU 수요는 현재 가치 대비 각각 6배, 7배, 16배, 21배, 2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sup>9</sup>



## 실사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관심 증가

'삼림 벌채 배제 제품 규정'(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은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으나, 특정 상품이 삼림 벌채하지 않고 생산국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생산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판매,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또 생산국의 거버넌스가 부실하거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사의 위험 평가 단계에서 부적절한 인권 관련 프레임워크 또는 인권 침해해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규정 미준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 해당 상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특히 소비재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소, 콩, 고무, 목재, 커피, 팜유, 코코아 등 특정 재료로 만들거나 먹인 제품을 EU 시장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4년에 EU 집행위는 더 많은 상품을 목록에 추가하여 규정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나아가 CSDDD는 EU 및 비(非)EU 기업이 사업, 자회사,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 및 인권 실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도입할 것이다. 기업은 파악한 잠재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실제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전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집행

CSDDD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물론 노동조합과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옴부즈맨'(Ombudsmen)도 피해자를 대신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활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SDDD를 포함해 EU 그린딜을 구성하는 많은 법률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이미 프랑스나 독일에서 유사한 법률로 인한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이미 주요 글로벌 브랜드를 상대로 하는 다수의 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다. 소송이 구체화되면 기업의 자본 조달 능력뿐만 아니라 평판과 브랜드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sup>10</sup>

##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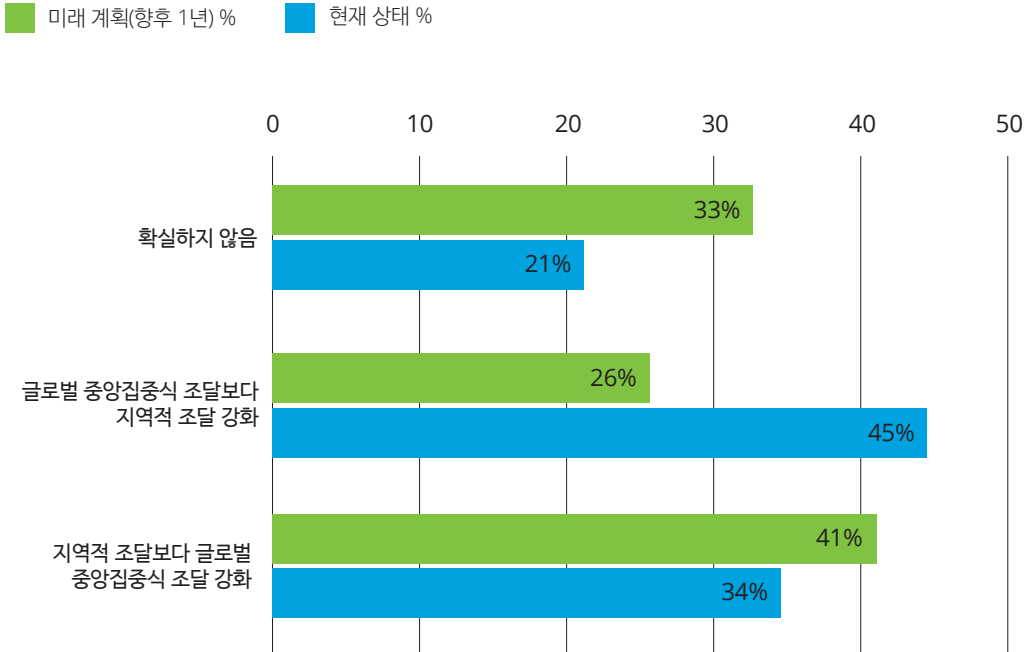
### 공급망을 점검하라.

앞서 설명한 규정에 포함된 금지 사항, 제한 사항 또는 목표에 따라 해당 범위의 모든 기업은 자사의 공급망을 평가해야 하며, 일부 기업은 기존 공급업체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거버넌스가 열악한 국가에 공급업체가 위치해 있을 수 있다. 혹은 규정 준수 비용 증가로 인해 EU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관점으로 공급망을 이해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떤 기업은 일부 지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는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최근 한 딜로이트 연구에 따르면 향후 1~3년 이내에 많은 기업이 글로벌 조달을 다시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sup>11</sup>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이 가져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비용과 효율성을 활용하고자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시행 예정인 규제 준수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기업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규제 당국이 정한 기한 이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비용으로 원자재를 확보하거나 취약성이 적은 공급업체를 확보하여 공급망 차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림 6. 중앙집중식 글로벌 소싱 VS 지역 소싱 (현재 상태 및 미래 계획)



출처: 딜로이트 분석, 2023.

### 종합적인 관점으로 규제 진전을 지켜보며 시너지 활용

기업은 EU 및 국가 차원의 규제와 국가 간 잠재적 차이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산업 전반에 걸쳐 공급망의 여러 주체 간 투명성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는 시스템 및 프로세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하는 솔루션을 활용하면 공급망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조달 책임자나 공급망 책임자 같이 일상적으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재무, 내부 리스크 관리, 조달 부서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연결성을 강화해 기업 내부 및 공급망 전반에 적절한 정보 흐름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는 기업 평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이해관계자 및 주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MIT의 2022년 공급망 지속가능성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 중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라는 투자자들의 압력이 '보통에서 매우 높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6%에 달했다.<sup>12</sup>

### 전략적 공급망 관계 계획 수립

기업은 다음 단계로 공급망의 공시 위험을 파악하고 완화하기 위해 현재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있다. 공급망 내 주체들과 목표한 대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보다 광범위하게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 탈탄소화

많은 기업이 탈탄소화 목표를 설정하고 전환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U에서는 탈탄소화 분야의 규제 발전, 운영 모델의 변화, 시장의 기대치 등이 급격한 변화를 주도하며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 2024년 기업의 최우선 과제는 Scope 1, 2, 3 배출량을 파악하고, 특히 단기적으로 배출 목표를 세우며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 2024년 탈탄소화 현황

지난 해 EU는 CSRD 공시, 탄소세, 지속가능한 연료, 재생에너지, 전력 시장, 건물 및 그린 인프라, 탄소 제거 등 탈탄소화의 주요 영역에서 조치를 취했다. 그림 8은 관련 규제 이니셔티브의 일정에 대한 개요이다.

그림 7. 주요 EU 탈탄소화 규제 이니셔티브 일정

규제	제안	입법 동향	발표	발효	적용 시점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3분기	전환기 시작	2023년 3분기	2023년 3분기	2023년 4분기
대체연료인프라규정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	2021년 3분기	발효	2023년 3분기	2023년 4분기	2024년 2분기
탄소중립산업법 (Net-Zero Industry Act)	2023년 1분기	2024년 4월 25일 유럽의 회 최종 승인, 이사회 최종 채택 예정	2024년 예정	2024년 예정	2026년 예정
리퓨얼EU항공규정 (RefuelEU Aviation)	2021년 3분기	발효	2023년 4분기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해운연료규정 이니셔티브 (FuelEU Maritime Initiative)	2021년 3분기	발효	2023년 3분기	2023년 4분기	2025년 1분기
건물에너지성능 지침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	2021년 4분기	2024년 4월 12일 이사회 최종 승인	2024년 예정	2024년 예정	2025년 예정

탄소제거인증규정 (EU Carbon Removal Certification Regulation)	2022년 4분기	진행중	2024년 예정	2024년 예정	2024년 예정
EU전력시장개혁 (EU Electricity Market Reform)	2023년 1분기	2024년 3월 18일 이사회 최종 승인	2024년 예정	2024년 예정	2024년 예정
제3차재생에너지지침 (Renewable Energy Directive III)	2021년 1분기	발효	2023년 4분기	2023년 4분기	2025년 1분기*
EU배출권거래제개정 (Revisions to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	2021년 1분기	발효	2023년 3분기	2023년 3분기	2024년 1분기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CSRD)	2021년 2분기	발효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025년 1분기

참고: \* 2024년 2분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허가 조항  
출처: 딜로이트 분석, 2024년.

### 2024년 탈탄소화의 중심, CSRD

EU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모든 규제 중에서 2024년에 정부 및 공공 서비스를 제외한 산업 부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는 CSRD이다. CSRD에 따라 감축 목표가 세워져 있다면 배출량을 추적하고 배출량 감축 목표를 공시해야 한다. 기업은 자사가 단기 목표(2025년 및 2030년)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탄소배출량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 중기(2040년) 및 장기(2050년) 계획이 지구 온도 상승 목표인 1.5°C 이내를 목표로 탄소 감축 궤적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장해야 한다.

### 탈탄소화에 대한 CSRD의 시사점

CSRD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탈탄소화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 기업은 탄소배출량 감축을 기록해야 한다. 공개한 계획에 따라 가치사슬 전반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투명성이 강화됨에 따라,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기업은 고객, 투자자, 금융 기관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예리한 시선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
- ✔ 공시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다. 이중 중대성(영향 및 재무적 중대성) 원칙에 따라 기업은 보고해야 할 영향과 위험, 기회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현재 및 향후 시행된 탈탄소화 규제가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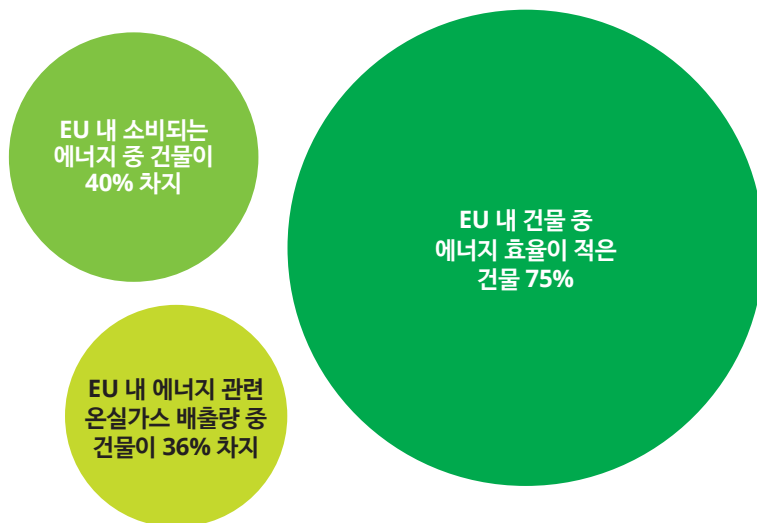
- ✔ Scope 1, 2, 3 배출량을 추적하고 보고한다. 2024년 회계연도부터 시작해(2025년 첫 공시), 이미 NFRD에 따라 공시중인 기업은 전체 가치사슬에 대해 높은 품질의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직원 수가 750명 미만인 기업의 경우 첫째에는 Scope 3 배출량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

###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우선순위 분야

**원자재 및 재생 연료:** EU는 산업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재생 연료 등 주요 영역에 규제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탄소국경 조정제도에 따라 EU는 2026년부터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 탄소 집약적 수입 제품에 탄소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자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또한 EU 배출권거래제(ETS)는 2025년부터 해상 운송 분야까지 확대되어(2024년 배출량 보고), 2026년부터 이 산업에 무상 할당량을 줄이고 2034년에 단계적으로 폐지할 전망이다. 지속가능한 운송 연료와 관련해 EU는 '리퓨얼EU항공규정'(RefuelEU Aviation)과 '해운연료규정이니셔티브'(FuelEU Maritime Initiative)를 도입했다. 이 두 규제는 2025년부터 항공기와 선박으로 하여금 최소 2%의 지속가능한 연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2050년에 각각 70%와 80%까지 늘릴 예정이다.

**건물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준:** 올 4월 12일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이 개정안이 승인됐다. EPBD는 EU 전역의 건물이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며, 2050년까지 EU 역내 모든 건물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U에서 건물의 탄소배출량이 모든 에너지 관련 배출량 중 36%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발전이다.<sup>13</sup> 기업이 직면한 또 다른 과제는 공공 충전소에 대한 기준이 수립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체연료인프라규정(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은 충전 및 주유 인프라의 계획, 입찰,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 표준 절차의 신속한 수립을 요구한다.

그림 8. 유럽 전역 건물의 에너지 사용 현황



출처: Making our homes and buildings fit for a greener futur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1.

## 부동산 부문의 큰 과제

EU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부문의 탈탄소화가 필수적이다. EPBD의 범위에는 상업용, 공공용, 주거용 건물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 지침이 건물 소유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EPBD는 국가별 정책에 의존하기 때문에 EU 전역의 건물 소유주는 신축 또는 구축 건물이 에너지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려면 현지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건물의 경우 필요한 개보수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태양 에너지, 프리케이ابل링(Pre-cabbling), 전기차 충전소 등을 요구하는 제3차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III), 대체연료인프라규정 등의 규제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부문은 새로운 규제 요건뿐만 아니라 시장의 기대와 그에 따른 새로운 자본 지출을 고려해, 가치를 제고하는 투자 전략과 프로세스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건물에서 상당한 양의 배출량을 감축하면 부동산 부문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2027년에 예정된 건물에 대한 EU 배출권거래제 시행에도 대비할 수 있다.

지금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면 자본 지출을 장기간에 걸쳐 배분할 수 있어 재무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또 필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산 폐기 또는 가치 손실 등의 잠재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기업들은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자문해 봐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EPBD가 요구하는 요건과, 건물 개조 및 기술 활용에 드는 자본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건물 신축과 개보수에 있어 탄소 배출량이 적은 건축 자재를 쓰고 있는가? 현재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믹스는 어떻게 되며, 재생에너지로 전환 가능한가?

## 재생에너지와 그린 인프라가 이끄는 전기화(electrification)

최근 EU가 채택한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을 42.5%까지 끌어올리고자 하는 제3차재생에너지지침이다. 현재 EU는 이 목표치를 훨씬 밑도는 상황이다.

제3차재생에너지지침에 따라 EU 회원국은 산업별 목표를 설정하여 42.5%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 ✔ 운송 부문의 경우 회원국은 두 가지 선택지, 즉 '온실가스 배출량 14.5% 감축'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량 29% 이상 증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 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용은 매년 1.6%씩 증가해야 한다.
- ✔ 건물은 2030년까지 에너지의 49%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에서 얻어야 한다.

제3차재생에너지지침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빠른 전개를 위한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최우선 사항으로 간주할 것이다. 즉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승인과 배전망 또는 저장소와의 연결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현재 EU는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 600GW의 태양광 발전 용량과 500GW 이상의 풍력 발전 용량이 필요하다. 이는 지금부터 2030년까지 매년 48GW의 태양광 발전 용량과 36GW의 풍력 발전이 추가로 필요함을 뜻한다.<sup>14</sup>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EU 전력시장 설계 개혁 이니셔티브'(Reform of the Electricity Market

Design)와 제3차재생에너지지침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소비자는 미래 가격을 고정하는 선물계약(Forward contract)을 포함해 여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가격변동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이 촉진될 것이다. 전력 생산자에게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고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방향 차액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공 지원이 이뤄진다. 회원국에는 초과 수익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방안이 장려된다.

EU는 2050년까지 운송에 기인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는 데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무공해 차량이 핵심이다. 그러나 충전, 송전 등을 위한 인프라도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EU는 2030년까지 300만 개의 충전소가 필요하지만,<sup>15</sup> 현재 그 수는 50만 개 미만이다.<sup>16</sup>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체연료인프라규정은 승용차, 승합차 및 대형차를 위한 전기 충전소와 수소 충전소에 대해 EU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설치 목표를 제시한다. 이 요건은 항구와 공항에도 적용된다.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은 2025년에 자동차와 배를 위한 고속 충전소와 모든 게이트에서의 정지된 항공기 전기 공급으로 시작해, 규정에 명시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2030년까지 이어진다. 회원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제를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지 EU 집행위에 보고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친환경 인프라, 특히 충전소 구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 기업, 부동산 소유주, 공공 부문 당국, 항만 및 공항 운영자는 회원국 표준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자체 시설에 충전 인프라를 제공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해야 한다.

### 탄소제거의 새로운 기회

현재 EU 배출권거래제(ETS)와 같은 규제적 탄소 시장(Compliance carbon market)의 탄소배출자는 할당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만 보유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었다. 자발적 탄소 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에서 탄소배출자는 또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자사의 배출량, 특히 불가피한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다. EU ETS의 탄소배출권 할당량과 자발적 탄소 시장 탄소배출권의 주요 차이점은 후자는 EU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자발적 프로젝트의 경우 EU 내에 탄소 제거를 모니터링, 보고, 검증하는 의무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2024년에 EU는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고품질 탄소 제거를 인증하는 최초 EU 차원의 자발적 인증서티브이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탄소 농업(산림 및 토양 복원, 습지 관리 등), 영구 저장(직접 공기 포집 및 저장), 오래 지속되는 제품 및 재료의 탄소 저장(목재 기반 건축) 등이 포함되지만,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은 제외된다.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각 탄소 제거 활동에 대한 인증 방법론이 개발될 것이다. 이러한 제거 활동은 제3자에 의해 인증되고,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중앙 기록보관소에 기록될 것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탄소 제거 프로젝트의 품질을 높이고 제거량을 정량화, 모니터링, 검증함으로써 그린워싱에 대응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자발적 탄소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기적으로 기업들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탈탄소화 전략의 일환으로 탄소 제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공공정책 과제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기관, 기준 설정 기관, 그리고 업계가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세 가지 ①자금 ②배출량 관련 회계 ③기업 가치사슬 이외 영역의 배출 완화 등)가 남아 있다.

## 자금

EU 집행위는 EU의 기후 및 에너지 안보 투자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조 2,500억 유로의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sup>17</sup> 이 추정치는 지난 10년보다 65% 이상 증가한 것으로, 기업과 가정을 포함한 민간 부문에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8</sup>

2030년까지 연간 친환경 기술 니즈의 최소 40%를 달성하고자 하는 EU의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에는 태양열, 열펌프, 육상 및 해상 재생에너지 기술,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기술,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등이 있다. EU는 '경제회복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하에 친환경 대책을 위해 2,500억 유로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 투자를 위해 인베스트EU(InvestEU)로 3,700억 유로 이상을 동원할 수 있다.<sup>19</sup> 그러나 EU는 필요한 투자의 대부분을 민간 자금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20</sup>

## 배출량 관련 회계

배출량 회계 이슈의 관건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으로, 데이터의 정확성이 부족하면 Scope 1, 2, 3 목표치와 배출량 감축 데이터의 비교가 어려워진다.

첨단기술 산업 내 기업들은 평균 125개의 1차 공급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가치사슬에는 7,000개 이상의 공급업체가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가치사슬이 훨씬 더 복잡한데, 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보유하는 1차 공급업체는 250개이며 전체 가치사슬에는 최대 18,000개의 공급업체가 있을 수 있다.<sup>21</sup>

특히 Scope 3의 경우,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일부 개발도상국의 공급업체는 재생에너지 및 대체 연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라 Scope 1과 2 배출량을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다. 공급업체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이러한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이러한 배출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가치사슬 이외 영역의 배출량 감축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은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제거하거나 저장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가치사슬 이외의 영역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투자나 조치는 전반적인 탈탄소화 전략의 일환으로 공시될 수 있다. 넷제로 표준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가치사슬 너머의 배출량 완화'(Beyond Value Chain Mitigation)는 기업들과도 관련이 있는데, 비용이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더 이상 가치사슬 내 배출량을 줄일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면, 이외 영역에서 나머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는 가치사슬 이외 영역의 배출량 감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에 신뢰성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최소 벤치마크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치사슬 너머의 배출량 완화를 지침이 시사하는 바는 기업, 특히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기업이 기후 완화를 극대화하고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

###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상당한 탄소배출 감축을 계획한다.

- ✓ 배출량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2030년, 2040년, 2050년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포함한 종합적인 감축 전략을 수립한다.
- ✓ 예상되는 사업 성장 및 배출량 궤적과 연계된 마일스톤을 포함한 중기 계획(2030년)과 명확한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을 수립한다.
- ✓ 탄소 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전략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정량화하고 자금 조달 방법을 평가한다.

### 원자재, 화석 연료, 빌딩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인다.

- ✓ 주요 원자재에 대한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하고 저탄소 대체품을 찾아 잠재적인 탄소세를 줄이고 회사의 배출량 기록을 개선한다.
- ✓ 대체 연료 사용을 늘리거나 무공해 대체 연료로 전환하여 차량의 화석 연료 소비를 줄인다. 저탄소 운송 옵션을 제공하는 공급업체와 협력하는 것도 방법이다.
- ✓ 건물 개보수와 친환경 기술 도입을 통해 건물 배출량을 정량화하고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기업은 건물의 에너지 믹스를 파악하여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고 개보수 또는 신축 시 저탄소 자재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기화, 재생에너지, 그린 인프라에 집중한다.

- ✓ 기업은 실현 가능한 모든 전기화 솔루션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솔루션에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항공 선박을 위한 해안가 전기 설비, 공항의 항공기 전기 공급, 연료로 움직이는 장비를 전기화된 대체재로 교체 등의 방안이 있다.
- ✓ 전기로 전환하려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환경적 이점을 십분 누릴 수 있다.
- ✓ 기업은 풍력 및 태양광 기술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전력 공급업체와 장기 계약을 협상할 수 있다.

# 그린워싱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 가치사슬의 새로운 파트너와의 협력부터 시작해 환경 관련 인증을 마케팅하거나 변동급여와 지속가능성 목표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녹색 전환에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투자자, 시민 사회, 고객 사이에서는 녹색 전환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린워싱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은 말과 행동에 불일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B2C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변화

2024년 2월 EU는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부여 지침을 최종 승인했다. EU 집행위는 소비자를 오도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 산업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도입하기 위해 2022년 3월 본 지침을 제안했다. 이 지침은 EU의 소비자 권리 지침과 불공정 거래 관행 지침을 개정한다. 이 지침은 금지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B2C 커뮤니케이션을 정의함으로써, 기업의 환경 성과의 마케팅 방식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다. 이 지침을 채택하면서 EU는 기업의 환경 관련 표현을 규제하는데 있어 전 세계 선두 주자가 되었다. 모든 산업은 고객에게 자의적인 환경 관련 표현에 대해 기존 규칙이 없거나 아직 수립 계획이 없는 한 이 지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금융 서비스 회사는 두 지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강화 지침이 확정되고 발효된 후, EU 회원국은 24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2026년부터 기업은 제품, 브랜드, 조직이 자의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립적, 긍정적, 또는 축소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 또는 표현을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포장재나 소셜 미디어 게시물, 광고에서 '녹색', '탄소 중립', '생분해성', '친환경' 등의 문구는 금지된다. 또한 지속가능성 라벨을 제공하는 기업은 해당 제도가 최소한의 투명성과 신뢰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EU 친환경 표시 지침은 기업이 고객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표현을 고안하고 마케팅할 때 충족해야 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입증, 검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린워싱을 방지한다. EU 집행위는 2023년 3월에 친환경 표시 지침을 제안했으며, 이는 올 2월 유럽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3월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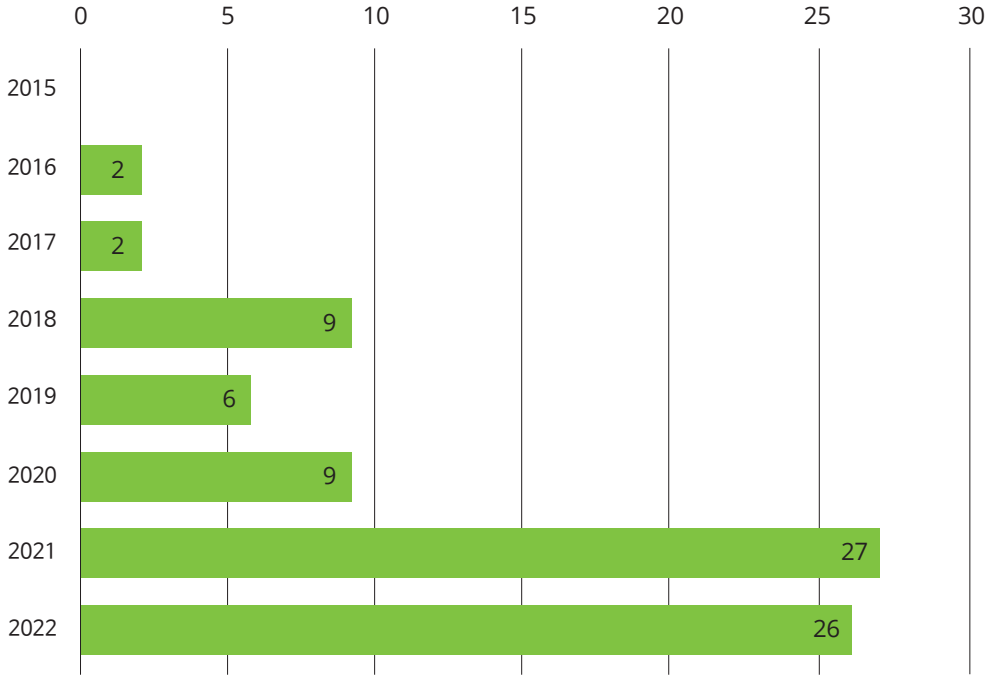
## 소송 위험 및 규제 조사 강화

기업이 그린워싱과 관련된 규제 환경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만이 아니다. 광고 또는 경쟁 관련 당국의 조치나 투자자 및 시민 사회의 소송은 오히려 새로운 규제보다 더 빠르게 그린워싱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소비자를 대하는 산업, 특히 구매 빈도가 높고 필수품을 판매 및 광고하는 산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sup>22</sup> 온라인에서 제품, 서비스, 브랜드를 마케팅하는 광고주와 기업도 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감독, 광고 관련 당국에 대한 컴플레인 제기과 소송으로 인해 불거진 그린워싱 고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그림 11). 소송은 허위 진술과 책임감 있는 광고 또는 공정 경쟁 관련 법률이나 기준 위반, 사기 혐의에 근거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한 재정 및 평판에 대한 영향은 주가 폭락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sup>23</sup>

엄격한 지속가능성 규제가 등장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감 의무가 명확해지며 증가함에 따라 소송과 감독 제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환경 관련 주장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킬 경우, 그린워싱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그린허싱(greenhushing)' 비난에 노출되어 이해관계자들이 더욱 엄밀한 시선으로 기업을 조사할 수 있다.

그림 9. 저탄소 전환 기여에 대한 기업 내러티브를 고발하는 사례 (2015년~2022년 소송 건수)



출처: 기후 변화 관련 소송의 글로벌 동향. 런던정치경제대학교 Graham Research Institute. 2023.06.29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모든 산업의 기업들은 새로운 지속가능성 공시 요건, 특히 CSRD와 관련해 그린워싱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활동과 전략의 보다 많은 측면에 대한 정보를 끌어올수록 기업은 공급망의 제삼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포함해, 품질이 낮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이터에 노출된다.

다음 박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기업은 통합 데이터 요건을 사용해 CSRD 및 그린워싱 규정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CSRD 시너지를 통해 비용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다. CSRD는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기업의 영향과 지속가능성 문제가 기업의 발전, 성과,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정보는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에 따라 보고돼야 한다. CSRD는 그린워싱 리스크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 기업이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데이터 수집, 분석, 사용, 검토하는 방법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면, CSRD, 소비자권한강화지침, 친환경표시지침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해 수집, 처리, 보증한 데이터는 기업의 B2C 환경 관련 주장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는 ESRS E3에 따른 물 소비 정보부터 ESRS E5에 따른 제품 소재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또는 조직의 환경적 영향과 성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는 고객의 지속가능성 선호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브랜드 전략에 반영되어 기업이 환경 관련 주장을 마케팅해야 하는 타겟층과 그 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 공동의 규제 대응은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이행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간소화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지속가능성 메시지를 이해관계자가 문제삼지 않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문화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림 10. 그린워싱 관련 주요 EU 규제 이니셔티브 일정

규제	제안	입법 동향	발표	발효	적용 시점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부여 지침 (Directive for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2022년 1분기	2024년 2월 20일 유럽 연합 이사회 최종 승인	2024년 1분기/ 2분기 예상	2024년 1분기/ 2분기 예상	2026년 1분기/ 2분기 예상
친환경표시지침 (Green Claims Directive)	2023년 1분기	2024년 3월 12일 유럽의회 승인	2025년 예상	2025년 예상	2027년 예상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CSRD)	2021년 2분기	발효	2022년 4분기	2022년 1분기	2025년 1분기

## 단기적인 규정 준수 비용과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의 균형점 모색

EU 집행위가 실시한 소비자권강화지침의 영향 평가에 따르면, 기업들이 포장재 및 온라인 메시지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삭제하고 환경 관련 주장을 입증하고자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데 최대 31억 유로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sup>24</sup> 필요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많은 초기 비용이 들 것이다. 한편, 지속가능성 라벨을 사용하는 기업이 내부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데 최대 35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성 라벨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와 판매자는 이러한 비용에 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기업이 지금부터 규정 준수 프로세스에 착수하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겪을 수 있는 혼란을 피하고 규정 준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미연에 조치를 취하면 프로세스와 통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내부 기술 격차를 파악할 수 있으며 맞춤형 업스킬링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동종 업계 기업을 분석하고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단을 파악하며 전략적 의사 결정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규정 준수 과제의 규모와 비용은 막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를 통해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의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가능성 관련 시장 기회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 폭넓은 가치 창출

기업이 발효 예정인 규정 준수에 필요한 변화를 위해 투자하면, 그린워싱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지속가능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브랜딩과 시장 포지셔닝을 재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가 포함된다.

기업은 CSRD에 대응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을 고민함으로써, 경영 보고서와 애널리스트 업데이트부터 마케팅 브로셔와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반에서 환경 성과를 고안하고, 소통하고, 추적하기 위한 일관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경 성과에 대한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은 시장에 민감한 재무 정보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향후 친환경표시지침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된다.

##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

### 지속가능성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토한다.

기업의 환경 관련 주장을 뒷받침하는 지속가능성 데이터의 관련 지표, 목표치를 검토한다. 데이터의 한계(품질 또는 가용성 측면)를 파악하여 수정하거나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 메시징을 검토하고 테스트한다.

B2C 환경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검토하고 대고객 메시징을 테스트하여 메시지가 명확하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 단계를 통해 기업은 메시징 지침을 고안하거나 개선하고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광고 또는 홍보 대행사에 공유하고 상응하는 업무 범위와 계약서를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다.

###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그린워싱 리스크를 포함시킨다.

그린워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광범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업은 기존의 역할과 책임을 검토하고 관리 정보를 구축하고 임원 보수 구조를 수정하여 적절한 인센티브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sup>25</sup>

# 주석

1. Deloitte, "What consumers are doing to adopt a more sustainable lifestyle – Sustainable Consumer 2023", 2023.
2. Joint Research Centre,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 preliminary study on new product priorities](#)", European Commission, 2023.
3. European Commission, "[Rules promoting the repair of goods](#)," 2023.
4. Joint Research Centre,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 preliminary study on new product priorities](#),"
5.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vision of EU legislation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30 November 2022.
6.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The 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 accessed 8 February 2024.
7. The Ellen MacArthur Foundation, [The Global Commitment 2022 report](#), 25 October 2022.
8. Samuel Carrara et al., "[Supply chain analysis and material demand forecast in strategic technologies and sectors in the EU – A foresight study](#)," European Commission, 16 March 2023.
9. Ibid.
10. European Centre for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 "[Ten years after Rana Plaza: Workers submit complaint](#)," 2023.
11. Deloitte, [Navigating the headwinds – Enhancing agility to regain momentum](#), 2023
12. Council of Supply Chain Management Professionals, [State of supply chain sustainability 2022](#), MIT Centre for Transportation & Logistics, July 2022.
13.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welcomes political agreement on new rules to boost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across the EU](#)," press release, 7 December 2023.
14. European Commission "[Joint statement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La Camera and EU Commissioner Simon: The time for speeding up renewables is now](#)," 30 March 2023.
15. European Commission, "[Mobility strategy](#)," 2021
16. Servet Yanatma, "[Access to EV charging stations in Europe is 'a significant concern'. How do countries compare?](#)," Euronews, 18 September 2023.
17. Laurent Abraham, Marguerite O'Connell, and Iñigo Arruga Oleaga,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easibility of an EU Climate and Energy Security Fund](#), European Central Bank, March 2023.
18. Frank Elderson "[Closing gaps to bend the trend: embedding the flow of finance in the transition](#)," European Central Bank, 5 May 2023.
19. European Commission, "[REPowerEU](#)," 2022.
20. European Commission, "[InvestEU programme adopted by Council](#)," press release, 17 March 2021.
21. Michael Taylor, "[EU endeavours to secure and strengthen its supply chain](#)," MRS Bulletin 48, (2023): pp 441–446.
22. Deloitte, "What consumers are doing to adopt a more sustainable lifestyle – Sustainable Consumer 2023."
23. Misato Sato, Glen Gostlow, Catherine Higham, Joana Setzer and Frank Venmans, [Impacts of climate litigation on firm value](#), Th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May 2023.
24. European Commission, "[Impact assessment report: Accompanying the document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uropean Commission, 30 March 2022.
25. Rosalind Fergusson and David Strachan, "[Building an effective culture to support sustainability-related objectives](#)," Deloitte, 10 February 2023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

# Deloitte.

## Insights

###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정동섭 Partner

dongjeong@deloitte.com

### 연구원

권은진 Senior Consultant

eukwan@deloitte.com

### 디자이너

박주리 Consultant

jooripark@deloitte.com

###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